

급증하는 노인자살, 대책 급하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자살률도 급격하게 증가, 사회문제가 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2001년 대구지역 60세 이상 노인 사망자 7천600여명 가운데 63명이 자살했다. 그러나 2005년 노인 사망자(8천200여명) 가운데 165명이 자살했다. 대구의 노인 자살자가 4년 만에 2.6배 증가했고, 경북지역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 5-8배가량 높은 수치다. 비단 우리 지역뿐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 75세 이상의 경우 아시아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노인층은 자살 최다 연령층이기도 하다. 노인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정·사회·경제적 소외감과 이에 따른 우울증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먹고사는 데 급급해 태반이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이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도 사라

지고, 노인의 삶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국가의 일로 떠넘기는 세태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경제적·신체적 능력이 미약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경로효친 사상 퇴색과 가족부양 능력의 부재가 노인들을 자살로 몰아붙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노인 자살률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 자살 예방 시설이나 기관도 전혀 없고 뚜렷한 대책도 없음은 물론이다. 현재의 재정,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노인 자살에 국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자살을 그들의 개인적·가족적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오늘 젊은 세대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외로움과 질병,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노인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급증하는 노인의 자살을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재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민간기업, 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 노인 자살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노인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